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184회 임시회>

2010. 2. 3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백 진 흠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10년 1월 2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개정 이유

- 하빈면 봉촌 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함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일부를 개정코자 함.

4. 주요내용은

- 봉촌 보건진료소의 소재지 변경
 - 현행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22-1번지
 -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58-1번지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3조
-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본 조례안은 하빈면 봉촌 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함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 구역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개정내용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소 재 지	관할구역	명 칭	소 재 지	관할구역
달성군 보건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98-1	달성군 일원		현행과 같음	
화원읍 보건지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26-1	화원읍 일원		현행과 같음	
논공읍 보건지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998	논공읍 일원		현행과 같음	
다사읍 보건지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향리 494	다사읍 일원		현행과 같음	
가창면 보건지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82	가창면 일원		현행과 같음	
하빈면 보건지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865	하빈면 일원		현행과 같음	
옥포면 보건지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814-3	옥포면 일원		현행과 같음	
유가면 보건지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848-6	유가면 일원		현행과 같음	
구지면 보건지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439-1	구지면 일원		현행과 같음	
서재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424-3	세천리, 서재1·2리, 방천리, 이천리, 달천리, 박곡리		현행과 같음	
봉촌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22-1	봉촌1·2리, 동곡리	봉촌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58-1	봉촌1·2리, 동곡리
무등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무등리 530-1	대평1·2리, 무등1·2리, 가곡1·2리		현행과 같음	
반송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166-2	기세리, 반송1·2리, 김홍1·2·3리		현행과 같음	
음리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음리 388	봉리, 용1·2·3리, 상리, 쌍계1·2리, 초곡리, 음리, 양리1·2리		현행과 같음	
한정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한정리 596-62	한정1·2·3리, 가태1·2리, 본말1·2리		현행과 같음	
대암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231-3	대암1·2리, 묵단1·2리, 유산리, 내1·2리		현행과 같음	
장리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장리 61-1	오설리, 도동1·2리, 장리		현행과 같음	
고봉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314-4	고봉리, 평촌1·2리, 가천리, 예현리, 용암1·3리		현행과 같음	

○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도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역에 기본적인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써 우리 군내에는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신축 이전한 봉촌보건진료소는 1984년 건축되어 진료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이전하였으며, 그에 따른 진
료소의 위치 변경사항으로 행정기구 설치 규정에 적합함.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8조 (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 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10년 1월 2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사회복지과장)

3. 개정 이유

-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폭넓게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장학재단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해 지원함에 있어 재단법인 달성군향우회 장학재단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은

- 당초 지원대상인 (재)달성장학회, (재)화원장학회 등 10개 장학회에서 (재)재경달성군향우회 장학재단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총 11개 장학회로 함.

5.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달성
장학회 등 10개 장학회 이외에 같은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재)재경달성군향우회 장학재단을 현행 조례에 의한 지
원대상 장학회(재단)에 포함시키기 위함.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가. 본 장학회 육성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출연금 및 운영자금
의 지원 대상 재단법인 장학회로서의 타당성 문제

○ 달성군지원대상 장학회 현황

구분	장 학 회 명	소 재 지
현행	재단법인 달성장학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313번지
“	재단법인 회원장학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원읍 찬내리 426-1번지
“	재단법인 논공효천장학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998번지
“	재단법인 다사장학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85-1번지
“	재단법인 아우장학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233-1번지
“	재단법인 정목하빈장학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933-1번지
“	재단법인 옥포경복장학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814-3번지
“	재단법인 현풍현암장학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부리 482번지
“	재단법인 유가청담장학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815번지
“	재단법인 구지면장학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439-1번지
추가	재단법인 재경달성군 향우회 장학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2-15 유신빌딩

- 입법 타당성에 있어 현행 조례상에 장학회(재단)의 소재지¹⁾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지원대상으로서 타당하다고 봄.
 - 조례 제7조(출연금의 환수 등) 제2호에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출연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민법 제80조²⁾에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토록 하고 있음.
 - 그렇다면, 재단법인 재경달성군향우회 장학재단 정관 제34조³⁾(잔여재산의 귀속)상에는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어, 법인이 정관 제33조(해산)에 해당될 경우에 달성군의 출연금 등에 대하여 조례상의 환수근거에 의거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사례 :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재산 귀속에 따른 손해 발생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별표】의 지원대상 장학재단의 추가 포함에 대하여는 (재)재경달성군향우회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이 현행 조례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여 개정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됨.

1) 정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52-15 유신빌딩”에 둔다

2)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3) 정관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상에는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귀속된다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10년 1월 2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공원녹지과장)

3. 개정 이유

- 화원자연휴양림의 개장으로 시설사용료 징수와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은

-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를 비슬산 자연휴양림에 화원자연휴양림을 추가

5. 근거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화원자연휴양림의 조성으로 관리 운영대상에 화원자연휴양림을 추가 시켜 시설사용료 징수관련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

- 제3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휴양림의 명칭은 ‘화원자연휴양림’으로 하여 지역의 대외인지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였고, 위치도 현실에 맞게 명시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됨.
- 별표 시설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기존 비슬산자연휴양림의 사용인원과 면적기준별 시설사용료에 대비하여 적정 산정하였으며, 요금별 기준도 주중·주말·성수기·비성수기로 구분하여 사용시기별로 차등 산정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최대한 감안하였다고 생각됨.
- 따라서 현행 조례에 화원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관 계 법 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령〉

제16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 내지 제14호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0.31>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인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 「참전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9.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1.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2.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

13.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자

1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 외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각각 정한다.